

2024년 11월 2일 시행

2024년 소방위 승진시험

응시번호	
성명	

【 시험 과목 】

편철 순서	제 1 과목	제 2 과목	제 3 과목
과 목 명	행정법	소방법령Ⅳ	소방전술

응시자 준수 사항

☞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 감독관 또는 방송’의 안내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지 표지의 ‘응시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시험을 시작하면 시험지의 ‘편철 순서’, ‘페이지 수량’, ‘인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문제를 푸십시오.

※ 본 시험지는 모두 16쪽입니다.

3. 시험을 시작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고,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답을 하나만 고르십시오. 운영 요원에게 문제 내용에 관한 질문은 일절 하실 수 없습니다.

☞ 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 행정법 】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다.
- ②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본법」상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④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량권 불행사 및 해태는 그 자체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 ②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는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 ④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부담부 행정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 ②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갱신신청 없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주된 행정행위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갱신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한다.
- ④ 행정행위가 그 내용상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데 유효기간이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단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4.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③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통지 또는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애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하고 상대방이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행정법 】

5.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행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 ② 선행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 행정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므로 하자의 승계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 ③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된다.
- ④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행위의 위법을 후행행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6.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는 인정될 수 없다.
- ②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③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관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노선면허가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례는 원칙적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 모두 취소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제한에 관한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재송취소의 경우에는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8.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③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을 할 수 없다.

【 행정법 】

9.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한 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10.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행정상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 ②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장래에 향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며 이에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보안처분 등이 있다.
- ③ 대집행의 근거법으로는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과 대집행에 관한 개별법 규정이 있고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근거법으로 「국세징수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여러 개별법 규정이 있다.
- ④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11.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집행은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 비용의 징수를 거쳐 행한다.
- ②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계고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계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③ 대집행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행정청은 그 금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구두로써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비용납부명령은 비용 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이다.
- ④ 계고처분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는데 상당한 이행기간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12. 행정질서벌(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과태료 부과권자는 개별 법률에서 정함이 없이 법원이 「형법」에 따라 정하며 개별 법률에서 행정청이 부과하도록 한 경우에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부과한다.
- ④ 행정청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인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이의 제기를 받은 부과행정청은 관할 검찰에 통보하여 검사가 과태료를 결정한다.

【 행정법 】

13.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②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나 결정도 가능하다.
- ③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④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의무자가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 사유, 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14.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즉시강제는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시 그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②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의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이므로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상 즉시강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③ 즉시강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더라도 영장주의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15.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 적용되는데 이것은 국가권력이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적법절차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며 행정절차에도 적용되므로 적법한 행정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적법절차원칙이 직접 적용되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 ③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은 행정절차의 요소인데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다.
- ④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공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②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③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반드시 그 문서가 원본일 필요는 없다.
- ④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 행정법 】

17.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반사실등의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한다.
- ②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도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공표로 인하여 당사자의 명예·신용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8.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배상법」상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으나 압류하지 못한다.
- ②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 ③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 ④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 ②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행정심판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③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 ④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다.

21. 「행정심판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 ④ 심리기일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하며,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22. 행정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저작권 등록업무의 처분청으로서 그 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
-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 ③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상급행정청을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로 한다.
- ④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 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에스에이치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정당한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가 된다.

23.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병역법」상 군의관이 하는 징병검사시의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②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4. 「행정소송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사정판결의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5.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② 「행정소송법」상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소방법령Ⅳ 】

1. 「소방공무원 임용령」상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청장은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면직,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119특수구조대 안에서의 전보권을 해당 119특수구조대장에게 다시 위임한다.
- ③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119특수대응단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기관 안에서의 전보권을 119특수대응단장에게 위임한다.
- ④ 소방청장은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상 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성적에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 관련 교육과정 및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외부 교육기관의 직무 관련 교육과정은 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성적에서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은 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능력에 관한 성적”이란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한다.
- ④ 직장훈련성적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장훈련의 성적 중 평정 기준일 이전 12개월간의 평정점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상 근무성적등 평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무성적평정은 수, 우, 양, 가로 구분한다.
- ②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 ③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근무성적평정 조정위원회는 피평정자의 상위직급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소방공무원 임용령」상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구성 인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을 제외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15퍼센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②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령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20퍼센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가점해야 한다.
- ④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상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에서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과 교육훈련성적의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순위, 신규채용일 또는 승진임용일, 계급, 담당업무, 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기관장등에게 교육훈련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또는 졸업 후 10일 이내에 그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소방법령Ⅳ 】

7.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시·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승진심사기간 중에는 둘 이상의 계급에 대한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특별승진심사나 근속승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근속승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인사교류 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소방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서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소방위는 해당 계급에서 근속승진기간으로 규정된 6년 6개월 근속한 경우,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된다.
- ④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소방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서 2년을 단축할 수 있다.

9.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징계령」상 소방공무원의 징계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②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③ 「소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시·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감봉 및 견책은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한다.
- ④ 「소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관할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0. 「소방공무원 징계령」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으로 (가)~(라)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 (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도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나)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해당 징계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징계등 사건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라)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가), (나), (다), (라)
- ② (나), (다), (라)
- ③ (다), (라)
- ④ (가), (나)

【 소방법령Ⅳ 】

11. 「소방공무원법」상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준감의 계급정년은 4년이다.
- ②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근속여부와 관계없이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포함한다.
- ③ 정계로 인하여 소방경으로 강등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며, 그 기간의 산정은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④ 소방청장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되,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소방공무원법」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상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가)~(라)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 (가)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을 한다.
- (다) 고충심사청구가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을 한다.

- ① (가), (다), (라)
- ② (가), (나)
- ③ (나), (라)
- ④ (나), (다), (라)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 및 지정수량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외의 것을 말한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 ② 제3류 위험물인 “자연발화성 및 급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③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섭씨 25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④ 제5류 위험물인 “자기반응성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한다.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 위험물에서 제외되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 ②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③ 과산화다이쿠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④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소방법령Ⅳ 】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에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② 옥내탱크저장소의 옥내저장탱크(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 제외)를 보수하는 경우
- ③ 옥외탱크저장소에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④ 주유취급소의 경우 300 m(지상에 설치하지 않는 배관의 경우에는 30 m)를 초과하는 위험물의 배관을 신설하는 경우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반기준으로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정지의 처분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1차 행정처분으로 허가취소한다.
- ② 개별기준으로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하는 경우 1차 행정처분으로 허가취소한다.
- ③ 개별기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1차 행정처분으로 지정취소한다.
- ④ 개별기준으로 탱크시험자가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1차 행정처분으로 등록취소한다.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 제외)로서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을 취급하는 것 주위에는 방유제를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취급탱크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용량의 50%이상으로 한다.
- ②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 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은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의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 ④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일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를 20m이하로 할 수 있다.
- ②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인 경우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적린을 저장하는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는 2,000 m² 이하로 해야 한다.

19.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2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소방법령Ⅳ 】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의 소화난이도등급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단, 제시한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옥외탱크저장소 중 소화난이도등급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형수동식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 ② 연면적 150 m²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로서 150 m² 이내마다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소화난이도등급Ⅰ에서 제외한다.
- ③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로서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포함된다.
- ④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은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포함된다.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의 지정수량과 같은 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위험등급에 관하여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품 명	지정수량(kg)	위험등급
황린	20	(㉠)
황화인	(㉡)	Ⅱ
알킬리튬	10	(㉢)

- ① ㉠: Ⅰ ㉡: 20 ㉢: Ⅱ
- ② ㉠: Ⅱ ㉡: 20 ㉢: Ⅱ
- ③ ㉠: Ⅰ ㉡: 100 ㉢: Ⅰ
- ④ ㉠: Ⅱ ㉡: 100 ㉢: Ⅰ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류 위험물 중 알루미늄의 탄화물을 장거리 운반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하여야 한다.
- ② 위험물 운송 시 장거리란 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 km 이상, 그 밖의 도로에 있어서는 200 km 이상을 말한다.
- ③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를 운송하게 하는 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위험물운송자는 운송의 개시 전에 이동저장탱크의 배출밸브 등의 밸브와 폐쇄장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 소화기 등의 점검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중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 ② 수직·수평도시험의 경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 ③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 ④ 필수 인력의 보조: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2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 중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에 설치하는 게시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게시판은 한 변의 길이가 0.6 m 이상인 정사각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게시판에는 “옥외저장탱크 주입구”라고 표시하는 것 외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 ③ 시·도지사가 화재예방상 당해 게시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게시판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주의사항은 적색문자)로 하여야 한다.

25.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규정의 법정형이 같은 것만을 (가)~(라)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 (가)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다)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라)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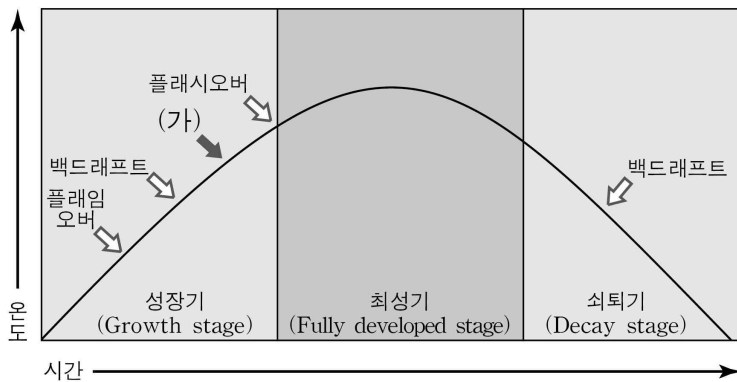
- ① (가), (나), (다), (라)
- ② (가), (나), (다)
- ③ (가), (나)
- ④ (다), (라)

【 소방전술 】

1. 고속도로 사고현장에서의 차량 주차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차된 소방차량 앞바퀴는 사고현장과 일직선 방향으로 둔다.
- ② 주 교통 흐름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위치에 주차한다.
- ③ 주차각도는 차선의 방향으로부터 비스듬한 각도로 주차하여 진행하는 차량으로부터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
- ④ 사고현장의 완벽한 안전확보를 위하여 사고현장(작업 공간 15 m 정도 포함)으로부터 제한속도에 비례하여 (예 : 제한속도 100 km/h의 도로인 경우 100 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추가의 차량(경찰차 등)을 배치시켜 일반 운전자들이 서행하거나 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구획실 화재에서 나타나는 (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복도와 같은 통로 공간에서 벽, 바닥 표면의 가연물에 화염이 급속하게 확산하는 현상이다.
- ② 연소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가스가 공기 중 산소와 혼합되어 천장 부분에 집적된 상태에서 발화온도에 도달하여 발화함으로써 화염의 끝부분이 빠르게 확대되어 가는 현상이다.
- ③ 밀폐된 건축물 내에서 화재가 진행될 때 불완전 연소된 가연성가스와 열이 집적된 상태에서 어떤 원인으로 신선한 공기(산소)가 공급될 때 순간적으로 폭발·발화하는 현상이다.
- ④ 화점 주위에서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류와 복사 현상에 의해 일정 공간 안에 있는 가연물이 발화점까지 가열되어 일순간에 걸쳐 동시 발화되는 현상이다.

3. 화재 진압 활동 중 배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통의 배연 작업은 소방호스라인이 내부에 진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 ② 화재 건물의 특징이나 개구부, 풍향, 화점의 위치, 화재 범위를 판단하여 개방 및 폐쇄해야 할 개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③ 지휘자는 배연 명령을 내리기 전에 건물 및 화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판단에 근거한 배연 작업의 결정을 해야 한다.
- ④ 건물에 설비된 제연설비 및 공기조화설비는 소방대의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으므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관창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규모 건물에서 관창 배치 우선순위는 해당건물 또는 연소위험이 작은 곳으로 한다.
- ② 일반 목조건물 화재에서 관창 배치는 연소위험이 작은 쪽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한다.
- ③ 풍속이 3 m/sec를 초과하면 풍하측의 연소 위험이 크므로 풍하측을 중점으로 관창을 배치한다.
- ④ 도로에 면하는 화재는 도로의 접하는 쪽을 우선하여 배치하고 풍상측, 풍하측의 순으로 포위한다.

5. 지하실 화재진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농연, 열기에 의한 내부 상황의 파악이 어렵고 활동 장애 요소가 많다.
- ② 출입구가 1개소인 경우에는 진입이 곤란하고 급기구, 배기구의 구별이 어렵다.
- ③ 고발포를 방사하는 경우에는 화세를 확대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층에 경계관창의 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④ 진입개소가 2개소인 경우에는 급기, 배기 방향을 결정한 후 배기측에서 분무방수 또는 배연기기 등을 이용하여 진입구를 설정한다.

【 소방전술 】

6. 고층건물 화재의 전술 환경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 (가) 소방전술적 관점에서 고층건물은 창문이 없는 건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건물의 문은 닫혀있고,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며, 유리가 매우 크고 두꺼워 파괴가 어렵고, 고층으로 인한 압력차 때문에 유리를 파괴할 경우 강한 바람의 유입으로 위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나) 고층건물 화재 진압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소방시설을 포함한 건물 설비 시스템이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방대원과 장비를 나를 수 있도록 작동되고, 소방용수(수도) 시스템도 고층까지 충분한 압력과 양으로 제공한다.
- (다) 화재현장에서의 통신(의사소통)은 필수적이다. 화재진압대원들은 인명검색과 구조활동 임무를 맡은 대원들과 통신해야 하고 건물 내에 진입한 팀은 현장지휘소와 통신해야 하지만, 강철구조로 된 고층건물은 무선통신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 (라) 대부분의 고층건물은 건축법상 내화구조의 건축물로 분류되지만, 소방전술적 관점에서는 더 이상 내화구조의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내화구조는 법이론 관점에서 폭발이나 붕괴 등의 원인이 없을 경우 화재를 한 개 층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벽, 바닥, 천장은 내화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 ① (가), (나)
- ② (가), (나), (다)
- ③ (나), (다), (라)
- ④ (가), (나), (다), (라)

7. 사고 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 중 제3단계(분석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각종 사고 및 활동 기록의 검토, 작업 분석
- ② 기술적 개선, 규정 및 수칙 등 제도의 개선
- ③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 활동 방침 및 계획 수립
- ④ 사고 원인 및 경향성 분석, 교육 훈련 및 직장 배치 분석

8. 다음에서 설명하는 금속화재용 분말 소화약제로 옳은 것은?

- Mg, Na, K, Na-K 합금의 화재에 효과적이다.
- 고온의 수직 표면에 오랫동안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체 금속 조각의 화재에 특히 유효하다.
- 염화나트륨(NaCl)을 주성분으로 하며, 분말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3인산칼슘(tricalcium phosphate, $\text{Ca}_3(\text{PO}_4)_2$)과 가열되었을 때 염화나트륨 입자들을 결합하기 위하여 열가소성 고분자 물질을 첨가한 약제이다.

- ① G-1
- ② Na-X
- ③ Lith-X
- ④ Met-L-X

9.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건수, 소실정도 및 소실면적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
- ②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더라도 각각 별건의 화재로 한다.
- ③ 전소는 건물의 70 % 이상(바닥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 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한다.
- ④ 발화 지점이 한 곳인 화재 현장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화재는 발화 지점이 속한 소방서에서 1건의 화재로 산정한다. 다만, 발화 지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재 피해 금액이 큰 관할구역 소방서의 화재건수로 산정한다.

10. 다음에서 설명하는 특성에 해당하는 주수 방법으로 옳은 것은?

- 수손 피해가 적고, 소화 시간이 짧다.
- 입자가 적어서 기류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증발이 활발하다.
- 벽, 바닥 등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화하는 경우에 유효하다.

- ① 반사주수
- ② 고속분무주수
- ③ 저속분무주수
- ④ 중속분무주수

【 소방전술 】

11.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SOP308 친환경 차량 사고 대응 절차에서 전기(동력)자동차 사고 대응 절차의 순서로 옳은 것은?

- ① 사고인지 → 고정 → 식별 → 불능 → 구조
- ② 사고인지 → 구조 → 불능 → 식별 → 고정
- ③ 사고인지 → 식별 → 불능 → 고정 → 구조
- ④ 사고인지 → 식별 → 고정 → 불능 → 구조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② ‘긴급구조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④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13. 일반적인 로프의 수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 (가) 스포츠 클라이밍 로프: 6개월

(나) 매일 사용하는 로프: 1년

(다) 매주 사용하는 로프: 3년

(라) 가끔 사용하는 로프: 4년

- ① (가)
- ② (가), (나)
- ③ (가), (나), (다)
- ④ (가), (나), (라)

14. 소방 현장에서 용도에 따라 로프 매듭(knot)을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마디짓기(결절)	이어매기(연결)	움켜매기(결착)
①	나비매듭	줄사다리 매듭	감아매기
②	고정 매듭	바른 매듭	잡아매기
③	한겹 매듭	피셔맨 매듭	절반 매듭
④	8자 매듭	8자 연결 매듭	이중 8자 매듭

15. 위험 물질의 표지와 식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방화협회(NFPA) 704 표시법에 따라 마름모형 도표에서 왼쪽은 청색으로 인체 유해성을, 위쪽은 적색으로 화재 위험성을, 오른쪽은 백색으로 반응성을 나타낸다.
- ② 미국 교통국(DOT) 수송표지는 위험 물질을 운송할 때 부착하도록 하는 표지(Placard)이다.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수송수단을 막론하고 위험 물질에 이 표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 ③ 화학물질 세계조화시스템(GHS)의 국내 도입에 따라 유해성 표지 방법을 우리나라는 7개의 그림을 사용해 왔으나 GHS 하에서는 9개 그림으로 분류 표시한다.
- ④ 미국방화협회(NFPA) 표시법은 화학약품의 유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소방대의 비상작업에 필요한 전술상의 안전조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의 역할과 함께 이 물질에 노출된 사람의 생명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정보를 현장에서 제공해 준다.

16. 줄을 이용한 수중 탐색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U자 탐색은 탐색 구역을 “ㄱ”자 형태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지형에서 비교적 작은 물체를 탐색하는 데 적합하다.
- ② 등고선 탐색은 해안선이나 일정 간격을 두고 평행선을 따라 이동하며 물체를 찾는 방법으로 물체가 있는 수심과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
- ③ 반원 탐색은 비교적 큰 물체를 탐색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탐색구역의 중앙에서 출발하여 이동거리를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매번 한 쪽 방향으로 90°씩 회전하며 탐색한다.
- ④ 직선 탐색은 시야가 좋지 않고 탐색 면적이 넓은 지역에 사용되며, 탐색하는 구조대원의 인원수에 따라 광범위하게 탐색할 수 있고 폭넓게 탐색할 수 있으나 대원 상호간에 팀워크가 중요하다.

【 소방전술 】

17. 콘크리트의 화재 성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재에 따른 콘크리트의 온도가 500℃를 넘으면 냉각 후에도 잔류신장을 나타낸다.
- ② 콘크리트는 약 300℃에서 강도가 저하되기 시작하는데 힘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강도 저하가 더 심하게 일어나며 응력이 미리 가해진 상태에서는 온도의 영향을 늦게 받는다.
- ③ 열팽창에 의한 압축 응력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초과할 경우 박리가 일어나며, 박리 속도는 온도 상승 속도와 비례하며 콘크리트 중의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박리 발생이 용이하다.
- ④ 콘크리트가 고온을 받으면 수산화칼슘($\text{Ca}(\text{OH})_2$)이 소실되어 이에 따라 철근부동태막(부식을 방지하는 막)이 상실되어 콘크리트가 알칼리화된다.

1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감염방지대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19감염관리실의 규격·성능 및 119감염관리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 등 세부 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 ②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구조·구급대원이 소독할 수 있도록 소방서별로 119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구조·구급대원은 근무 중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소방청장등은 유해물질등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부부터 15일 동안 구조·구급대원의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복기가 긴 질환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추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9. 다음 제시된 환자 평가 도구 및 환자 상태를 보고 (가)~(아)에서 산정한 평가 점수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환자 평가 도구	환자 상태
의식수준 평가 (GCS)	(가) 눈뜨기 : 통증 자극에 눈뜬 (나) 운동 반응 : 통증 자극에 뿌리치는 행동 (다) 언어 반응 : 언어 지시에 이해할 수 없는 웅얼거림
아프가 점수 (APGAR score)	(라) 피부색(일반적 외형) : 몸 전체 (손과 발 포함) 핑크색 (마) 심장 박동 수 : 99회/분 (바) 반사홍분도(뺨그림) : 자극시 최소의 반응(얼굴을 찡그림) (사) 근육의 강도(움직임) : 흐늘거림/부진함(근육의 긴장력 없음) (아) 호흡(숨 쉬는 노력) : 우렁참(울음)

- ① 12
- ② 13
- ③ 14
- ④ 15

20. 다음의 환자 상태를 참고하여 응급 환자 분류표(중증도 분류표)에서의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색으로 옳은 것은?

중증의 화상, 척추손상, 다발성 주요골절

- ① 흑색
- ② 적색
- ③ 황색
- ④ 녹색

【 소방전술 】

21. 구급 일지 내 시간을 기록한 내용을 통해 소요된 구급 반응 시간(Response Time)으로 옳은 것은?

신고 일시: 2024. 10. 25. 15:55
출동 시각: 2024. 10. 25. 15:56
현장 도착: 2024. 10. 25. 16:12
환자 접촉: 2024. 10. 25. 16:12
현장 출발: 2024. 10. 25. 16:20
병원 도착: 2024. 10. 25. 16:50
귀소 시각: 2024. 10. 25. 17:22

- ① 1분
- ② 16분
- ③ 17분
- ④ 25분

22. 영아(Infant)가 뜨거운 물에 다음과 같은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급대가 출동하였다. 9의 법칙과 손바닥 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한 화상 범위의 총합으로 옳은 것은?

- 얼굴(머리 포함) 전체 2도 화상
- 우측 팔 전체 3도 화상
- 우측 다리 전체 3도 화상
- 가슴에 환자 손바닥 크기의 2도 화상

- ① 40.5%
- ② 41.5%
- ③ 45.5%
- ④ 46.0%

23. 인체의 조직 별 주요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장의 원심방은 허파로부터 그 혈액을 받아들이고 원심실은 고압으로 동맥을 통해 피를 뿜어 낸다.
- ② 근골격의 3가지 주요 기능으로는 인체 외형을 형성하고, 내부 장기를 보호하며, 인체 움직임을 제공한다.
- ③ 배내 기관이 소화작용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인슐린 분비, 혈액 여과작용, 면역 반응 보조 역할(간), 독소제거(지라) 등 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피부는 인체를 둘러싼 커다란 조직으로 인체를 보호하고 감염을 방지하는 보호벽 기능, 인체 내부 수분과 기타 체액을 유지하는 기능, 체온 조절 기능,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24. 다음 (가)와 (나)에서 헬멧을 제거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와 제거해야 하는 경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가) 헬멧을 제거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 ㉠ 헬멧이 기도와 호흡을 평가하고 관찰하는데 방해가 될 때
- ㉡ 헬멧이 환자의 기도를 유지하고 인공호흡을 방해할 때
- ㉢ 헬멧 제거가 환자에게 더한 위험을 초래할 때
- ㉣ 헬멧을 착용한 상태가 오히려 적절하게 고정되어질 수 있을 때

(나) 헬멧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

- ㉤ 헬멧을 쓴 상태가 긴척추고정판에 환자를 고정시켰을 때 머리의 움직임이 없을 때
- ㉥ 헬멧 형태가 척추고정을 방해할 때
- ㉦ 고정시키기에는 헬멧 안에서의 공간이 넓어 머리가 움직일 때
- ㉧ 환자가 호흡정지나 심장마비가 있을 때

- ① ㉠, ㉢, ㉣, ㉧
- ② ㉢, ㉤, ㉥, ㉦
- ③ ㉠, ㉡, ㉣, ㉥, ㉦
- ④ ㉢, ㉣, ㉥, ㉦, ㉧

25. 다음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상의 외상환자 중증도 평가기준의 일부 내용 중 ㉠~㉤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으로 옳은 것은?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3단계. 손상기전
[] 추락 (성인 (㉠)m 이상 / 소아 (㉡)m 이상)
[] 고위험 교통사고
■ 차량전복 / 차체 내부 (㉢)cm 이상 안으로 밀림 / (㉣)cm 이상 차체 찌그러짐
[] 그 외 구급대원 판단
[] 다음에 해당
임신 (㉤)주 이상

- ① 102
- ② 104
- ③ 106
- ④ 108

수고하셨습니다.